



**특별기고**



**IMF시대 김대중 정부의  
정책 과제**

김학준 / 인천대학교 총장

# IMF시대 김대중 정부의 정책 과제

김학준 / 인천대학교 총장

## 머리말: 문제의 배경

19 98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사스런 해이다. 남과 북은 각기 국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회고하건대, 한민족은 1910년 8월 28일 일본제국주의에 국권을 빼앗겼다. 그때로부터 35년 동안 한민족은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 노예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국의 승리에 따라 일제가 패망하면서 한민족은 해방됐다. 그러나 연합국이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은 미군이 점령했고 북은 소련군이 점령했다. 그때로부터 3년 동안 한민족은 다시 외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것처럼 도합 38년의 외세 지배를 받은 뒤에야 남과 북은 각기 '독립 국가'의 수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 남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에서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던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분단체제가 성립됐다.

그때로부터 꼭 반세기가 흘렀다. 그동안

남과 북은 각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남은 때로는 민주 헌정을, 때로는 군사 정권을, 때로는 민군연합체제를 경험했으며 마침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북은 일관되게 1당독재체제와 1인지배체제를 유지했다. 남은 50년대에는 세계최빈국群에 속했으나, 60년대 이후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성취했고 1988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을 치러냈다. 북은 스탈리니스트적 명령경제체제 아래 60년대 중반에는 '사회주의적 기적'을 성취했으나, 70년대 이후 경제적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상반된 국가 경영을 시도하는 가운데 남과 북은 늘 대결과 긴장의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 1950~53년에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으며, 그 뒤에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이지만 때때로 무력 충돌을 겪었다. 1971~73년, 그리고 1990~92년에 잠시 대화의 시기를 가졌으나 그 효과는 결코 길지 못했다. 그래서 1993~94년에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군사적 긴장의 연장선 위에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마저 감돌았다.

이렇게 반세기를 보내놓은 뒤 오늘날의 시점에서 바라본 남북한 각자의 상황은 우울하다. 남은 1997년 12월 이후 외환 위기에 직면해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해 IMF와 협정을 체결했고 이로써 IMF관리 체제 아래 놓이게 됐으며, 북은 90년대초 이후 '침몰이 깊숙이 진행되는 난파선'이 된 채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오늘날의 상황 역시 우울하기만 하다. 세계가 갈등과 대결의 냉전 구도에서 벗어나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시대에 한반도는 유달리 '냉전의 외로운 섬'으로 남아 남북 대치의 족쇄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경사스러워야 할 국가 수립 50주년의 자화상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자조라고 할 것인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민족이 장래를 비판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한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며 저력있는 민족이다. 남북 모두가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새로운 국가 경영의 청사진 아래 새로운 출발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남북 모두에서 새정부가 출범했다. 북에서는 1997년 10월 10일에, 김일성이 오랫동안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 놓은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

망한 뒤 사실상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북한을 통치해온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됐다. 그는 북한의 '공화국 창건' 50주년이 되는 1998년 9월 9일에 국가 주석을 겸할 것으로 보인다.

남에서는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와 제2야당 '자유민주연합'이 공동 추대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선거를 통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한 차원 높게 발전하게 됐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새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몇 개의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살피려는 것이 이 글의 1차적 목적이다. 끝부분에서 김정일 정권의 장래, 그리고 남북 관계의 장래에 대해 간략히 말하고자 한다.

### 한반도 위기 상황의 외부적 요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남과 북이 직면한 오늘날 위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으로는 외부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개재되어 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넓게 보아 국제적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 80년대 말과 90년대초 사이에 미국이 주도하고, G7으로 대표되는 서방 선진 경제 대국이 과두체제를 형성한 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는 공산주의 정권들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계자본주의의 거대한 힘 앞에서,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의 공산 정권들이 모두 와해되고 말았다. 아시아에서도 몽골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졌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장 경제가 도입됐다. 아프리카에서도 모든 공산 정권이 해체됐다.

이처럼 범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세계자본주의는 전세계를 세계자본주의의 패권 아래 통합시키고 있다. 쉽게 말해, 세계자본주의는 전세계를 자신의 단일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의 국제적 도구가 1994년 4월에 서명된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협정'에 따라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과두 지배 내부 국가'와 '과두 지배 외부 국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국제적 정치·경제체제를 미국 단독으로 패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선진 경제

대국이 공동으로 과두지배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보는 학자가 더 많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두지배권을 행사하는 국가群에 속한 국가가 '과두 지배 내부 국가'이며 과두 지배의 대상이 된 대다수의 국가가 '과두 지배 외부 국가'이다.

'과두 지배 내부 국가군'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폐지시키고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킨 뒤, 자유 무역의 기치 아래, 어떠한 '과두 지배 외부 국가'도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 무역을 할 수 없게끔 강제해왔다. 자유 무역의 명분 아래, '과두 지배 내부 국가'는, 특히 미국은 대다수의 '과두 지배 외부 국가'의 국경을 무너뜨리면서 자본과 노동 및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고 세계화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패권을 확립해온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정치·경제체제 아래 每個의 '과두 지배 외부 국가'는 사실상 주권을 제약받고 있다. 특히, 정책 주권을 제약당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조차 채택·집행하기 어렵게 됐다. 그리하여 '과두 지배 외부 국가'들은 세계자본주의의 상품이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적 정치·경제체제는 '신판 제국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과두 지배 내부 국가'는 每個의 '외부 국가'를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음에 반해, 후자는 전자의 강제에 대체로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과두적 강제'와 '강제된 순응'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 결과는 '과두 지배 내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과두 지배 외부 국가'의 경제 위기로 나타났다. 미국이 수십 년의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 무역 흑자로 돌아섰고 또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 재정 흑자로 돌아선 현실, 반면에 동아시아가 최근의 한국·타일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가 말해주듯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이 그 점을 입증한다.

북한의 경제 파산도 그 뿌리는 같은 곳에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위력 앞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은 배후 지원 세력 또는 경제 협력 동반자를 상실함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새로운 국제적 정치·경제 질서의 등장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는 안보이다. 냉전 질서 아래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 진영의 결속을 우선시했으며, 그러한 큰 틀 안에서 한국을 對蘇 견제 기지로 중시했으며 북한을 한미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위협적 존재로 인식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 질서가 와해된 이후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균축을 추진해왔고, 지난날의 공산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세력권 안으로 유인하는 '포용과 확

대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종래의 동맹 관계에 변화와 재조정을 가져오게 됐다.

한반도의 경우, 한국의 對蘇 견제 기지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됐으며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시혜'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을 더 이상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포용과 확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그러한 태도가 때때로 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한반도 위기 상황의 내부적 요인

그렇다고 해서 남과 북이 직면한 오늘날 위기 상황의 책임을 모두 외부적 요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 남과 북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우선 남의 경우, 고질적인 정경 유착이 주범으로 지적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집권 세력이 특정 기업들과 결탁해 그들에게 은행 대출이나 사업 상의 이익 등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아내는 관행이 우선 은행을 부실화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기업

활동에 관한 인허가권 및 규제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역시 경제 위기의 조장에 일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국가 경영 기술의 미숙 역시 경제 위기를 조장한 내부적 요인으로 지적돼야 하겠다. 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세계자본주의의 무제한 경제 공격에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폐쇄·고립의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한 수준에서 국제화를 추진한 한국조차 미국의 최신식 금융 기법을 깊이 체득하지 못해 미국 월街 투자자들의 달러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음은 뼈아픈 일이었다.

북의 경우, 김일성·김정일부자세습체제가 주범으로 지적돼야 할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미명 아래 시대착오적인 교조주의, 미신화한 주체사상에 달려 있는 이 봉건적 왕조체제는 최소한의 국제적 합리성을 보유했지 못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적 정치·경제체제에 신속하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남과 북 모두에서 국내 정치의 실패가 경제 위기의 주된 내부적 요인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경제분야 책임자들의 판단착오와 과오 또는 미숙 등이 겹쳐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남과 북 모두가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국가 경영 기술, 곧 스테이트그래프트

(statecraft)에서 미숙했음을 뜻한다.

남과 북이 직면한 오늘날 위기 상황의 또 하나의 내부적 요인은 남북 사이의 지나친 군비 경쟁이다. 脫냉전의 국제적 화해·협력 시대에, 그리하여 안보 환경에 본질적 개선이 실현된 시대에, 남과 북은 여전히 군사 대결 상태를 고수함으로써 말미암아 군사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각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남북 각자의 국내 복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외적 대응 능력을 줄어둘게 한 것이다.

### 경제적 당면 과제

위기의 요인들을 이렇게 분석할 때, 김대중 정부의 1차적 당면 과제는 한국 경제의 소생과 부흥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 경제를 IMF 관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을 위해 새정부는 수출의 증대와 수입의 억제 및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최우선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3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선 재벌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벌내 기업들 사이의 상호 보증 금지,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재벌내 부실 기업들의 매각, 문어발식 경영의 제한, 재벌내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회계감사, 결합채무제표의 채택,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확대 운영 등이 입법화되고 있다.

동시에 재벌 사이의 '빅 딜(big deal)' 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A재벌이 자동차 회사와 조선 회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B재벌 역시 자동차 회사와 조선 회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 A재벌은 자동차 사업을 B재벌에 양보하고 B재벌은 조선 사업을 A재벌에 양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거래를 통해 새정부는 산업 구조 조정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사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을 내실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새정부는 우선 종전의 관치금융을 버려야 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일도 시급하다.

이러한 조처들은 결국 경제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의 민주화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경제에서는 여전히 개발독재시대의 운영 방식이 유지됐고 그러한 방식이 만들어낸 폐해가 쌓여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조성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경제에서도 정치의 민주화에 걸맞는 민주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IMF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 조정(정리 해고)이 자유스러워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될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요청에 부응해 지난 2월초 노사정의 대타협을 성사시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냈고,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의 발효에 따라, 또 기업 도산이 겹쳐, 앞으로 몇달 사이에 120만 명을 넘는 새로운 실업자들이 쏟아져나올 때 사회 안정은 동요할 것이다.

IMF가 창립된 뒤 이제까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의 수는 도합 40 개이다. 그들 가운데 14 개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에 따라 대규모 소요 사태 또는 내란마저 발생했다는 사실을 새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사회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새정부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을 어떻게 소생시키느냐의 중대한 과제를 새정부는 안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래 중소기업은 도산의 도미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IMF 상황 아래 자금 유통의 길은 더욱 막혔고 시중의 실질 금리는 연 30%로 뛰어올라 어음 부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은 중소기업의 도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새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약효는 크지 않을 것이다.

## 외교적 과제

IMF 관리 아래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과제는 필연적으로 외교적 과제로 연결된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외환 부족에서 출발했으며, 그리하여 IMF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경제의 해결이 국제적 합의의 틀 안에서 찾아져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특히, IMF를 상대로, 그리고 IMF의 실질적 대주주인 미국을 상대로, 또 세계자본주의의 과두 지배자들인 G7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 외교를 효과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이 과제와 관련해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점은 국제적 신뢰의 회복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 및 각료들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게 언동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 IMF와 약속한 개혁을 빠르게 가시화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 외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안보 외교이며 통일 외교이다. 이 과제와 관련해 새 정부는 전통적 우방들과, 특히 미국과 우호 협력의 동맹 관계를 충실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MF 상황은 국내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미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 맹목적 민족주의의 열기와 운동은 국가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논리로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실용주의적 외교가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는 뜻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요청된다. 김영삼 정부 아래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됐다. 그것이 두 나라에, 특히 한국에 어떤 실질적 이익을 주었는지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좋은 싫든 간에 두 나라의 우호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일본과의 우호 협력의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새롭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동아시아에서도 마치 유럽에서처럼 다자간안보협력체제가 발족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어느 특정한 나라와의 군사 동맹에 매달리는 것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포괄적 집단안보체제를 세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 국내 정치의 과제

김대중 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내 정치 구조의 조정이다. IMF관리시대를 가져온 주범인 정경 유착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천문학적 숫자의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을 요구하는 현행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정경 유착은 결코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정당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공룡화한 중앙당 기구와 지방당 기구 모두를 과감히 축소시켜야 한다.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수가 선진 민주 국가의 그것과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적음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고 정당명부제를 도입함으로써 '돈 안드는 선거'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가 금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꾸준한 의식을 개혁시켜야 할 것이다.

거대해진 정부 기구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 이 과제에 관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미 대통령부의 기구를 축소시키고 중앙정부 기구를 통폐합시켰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기 위한 법제화도 끝냈다. 그러나 다수의 객관적 행정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축소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정부 기구와 공무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착수하지 못한 지방 행정 기구의 과감한 축소 조정 예컨대, 현행 3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일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과제도 중요하다. 특히 교육·교통·환경·복지 분야에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을 재훈련시켜야 한다.

지방 자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북돋고 참여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게 발

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남 출신의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영남·호남 사이의 지역적 갈등이 완화돼야겠다는 국민적 염원이다. 박정희 정권의 출범 이후 지난 30년 넘게 정치적 패권을 장악했던 영남, 그리고 영남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 대우 받아왔다고 느껴온 호남 사이의 반목과 대결이 해소될 수는 없다고 해도 완화될 수 있도록 특히 인사와 예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교육과 과학 및 문화의 과제

21세기 정보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교육을 통해 길러내는 과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교육 개혁을 부르짖고 있음에 계속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돼야 할 점은 IMF시대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줄여잡아도 GNP 대비 5%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다.

과학 기술의 진흥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의 과학 기술 수준은 신흥 공업 국가群의 일반적 수준에 비춰보면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선진 경제 대국의 수준에 비춰보면 미흡하다. 그 점이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 점을 명심

하고 새정부는 학교 교육에서 과학 기술의 진흥을 뒷받침해야 하며, 기업과 각종 연구기관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증액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과학 기술의 선진화없이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에 대해서도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國家像은 문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세계화시대일수록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찬란히 꽃피워야 한다.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를 명심하기를 기대한다.

## 평화 통일의 과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5년 안에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이 세기적 전환의 시기(1998. 2.25~ 2003. 2.24)에 북한에서 '대격변'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① 군사적 충돌을 경험하게 되거나, ② 정반대로 평화 공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거나, ③ 또는 경제 위기에 빠진 남이 붕괴하는 북을 떠맡게 됨으로써, 남의 곤경이 더욱 심화되면서 한반도 상황이 전반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살핀

다면, 북한의 경제 위기는 결코 극복되지 않은 채 더욱 깊어질 것이고 북한 인민의 물질 생활은 불행히도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그리하여 아무리 억압 통치와 세뇌 아래 순치 되어왔다고 해도 마침내 자신들의 불만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것처럼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도전이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

김정일은 자신과 정권의 활로를 1차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찾고자 할 것이다. 마침 미국은 세계자본주의를 전세계로 확대하려는 정책, 이른바 확대 전략을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올해 안에 '연락사무소'가 교환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1998년 1월에 북한과의 쌍무적 고위장성회담을 제도화할 뜻을 밝힘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정례적인 군사회담의 길을 열어 놓았다.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일 관계의 개선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뒤따를 것임은 물론이다.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서방자본주의의 바람이 '폐쇄의 동토'로 흘러 들어감을 뜻하게 되며, 그 바람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북한 사회를 밑바탕에서부터 동요시킬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방충망 이론'에 입각해 그것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나,

결국 거기에는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새정부는 북한의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막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만일 국내 보수층의 반발이 우려돼 북한의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겠다면, '너그러운 무시' 또는 '너그러운 방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의 대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일본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수교도 하지 않으려는 충동마저 느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의 출발점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지난 1991년 12월에 '남북간 화해와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양측 총리의 서명으로 성립시켰으며, 이 역사적 문서는 1992년 2월에 발효되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여기에는 남북 불가침은 물론, 3통(통신·통행·통상)과 군축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약속되어 있다. 남과 북이 이 문서에 입각해 서로 상대방을 향해 호의적으로 움직여나간다면 남북 관계는 평화 공존 단계로 전환하고 궁극적인 평화 통일의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거 운동 때 자신이 집권하면 이 문서의 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가 과연 어떻게 그 방향으로 김정일을 움직일 것인지, 또 어떻게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

목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의존하거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상대는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다. 물론, 한국은 경제 위기에 빠져 북한을 지원할 여유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IMF 위기 상황을 면하고 나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남북은 각각 위기 탈출의 활로를 상대방과의 교류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남북한이 진지하게 상호 군축을 시도하고 교류 협력의 길을 걸어나감으로써 평화 공존의 길에 들어선다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년 안에 남북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는다. 남은 IMF 극복에 주력해야 하고, 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심리적 조정을 시도할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대화가 아주 막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개시된 남·북·미·중의 4者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 틀 안에서 남북 대화가 겨우 유지될 것이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핵동결 문제도 이 틀 안에서 계속 토론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김 대통령의 남북한 및 미·러·중·일 등 6者공동선언 제의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의 강조

이다. 북한은 6者공동선언 제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따라서 이산 가족의 재회 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맺음말

한민족의 5,000년 역사를 보면 민족적 위기에 구국의 영웅 또는 지도자가 반드시 출현했고 민중은 그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오늘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구국의 민족적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까지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어왔다. 그는 선거 운동기의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하느님은 이 국가적 위기에 저를 쓰기 위해 지난 선거에서는 당선시키지 않고 저를 예비해왔다고 믿는다”고 말해 많은 유권자들을 감동시켰다. 그가 진실로 대정치가적 역량을 발휘해 한국의 국난을 극복하고 남북 평화 통일의 큰 길을 열게 되기를 그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해 거의 모든 국민이 갈망하고 있다. 30년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통해 미

국민을 단합시키고 마침내 미국 변영의 기초를 구축한 故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원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김정일 역시 민족적 입장에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가 진정으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한민족의 앞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이제까지 걸었던 길에서 큰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의 노선 변화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때 남북 사이의 관계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이처럼 남과 북은 각각 새로운 지도력 아래 자체의 내부 개혁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상대방과의 평화 통일을 진지하게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남과 북은 모두 국가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고 21세기 초에는 분단체제를 통일체제로 대체시킬 수 있다. **統**